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

윤 기 중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명예교수)

본고는 고려왕조이후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고려왕조시대나 조선왕조 시대는 통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근대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통치체제와 백성들의 생활상을 분석해서 소득의 불평등과 빈곤상태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즉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워 살던 마을을 이탈하거나 또는 통치체제에 저항하는 민란이 발생하면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그것이 생활고에 의한 저항이면 빈곤상태로 규정하게 된다. 그리고 빈곤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여 빈곤의 대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통계가 구비된 근대에는 불평등도 지표와 빈곤율 개념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1. 고려 왕조

1)고려 건국과 통치체제

왕건은 신라와 백제를 병합하고 AD 918년 고려왕조를 창건하고, 개성에 수도를 정했다. 통치를 위한 정치조직은 개국공신과 지방의 호족, 신라의 상급학자를 공헌정도와 중요도에 따라 관료조직의 직급을 부여하고 중앙의 집권체제를 조직한다. 6대 국왕 성종(981~997) 시대에는 지방정부조직을 완성하고 과거시험제도 도입과 각급 교육 기관도 개설했다. 그리고 국왕의 친위군과 수도방위군 그리고 지방 방위군제도를 확립하고 중앙과 지방의 통치조직의 완성되면서 각 급의 직위에 적합한 문관과 무관을 임명했다. 관료조직으로서의 귀족 사회조직이 완성하고 그 외 의사, 외국어통역, 천문 기상 그리고 음악 등의 잡과 관료도 선발 임명했다. 이들 관료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조건을 위해서 토지를 나누어주는 전시과법(the Stipend Land Law)을 제정하고 직

위와 직급에 따라 토지를 나누어주었다. 즉 5대왕 경종(975~981)시대에 문과(文官) 무관(武官) 그리고 잡과(雜科)로 나누어 계층은 18개로 층화하는 다원적 체제이었으나 11대왕 문종(1046~1083) 30년에 전시과법이 개정되어 다원적 계층을 18개 과로 통합 단순화시켰다. 개정된 전시과에 의하면 1과는 전(농경작지) 100결¹⁾과 시(산림) 50결, 최하위인 18과는 전 17결만 지급했다. 특징은 무관을 비교적 우대한 것과 계층을 단순화시킨 점이다. 분급된 토지는 농민(佃民)을 결박시켜 그 토지를 경작하게 한다.

2) 토지제도

고려조의 토지제도는 소유 관계에 따라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으로 나누어진다. 왕실소유의 내장전과 국가소유이거나 지방관청 소유 토지는 공전이다. 일반 농민이 조상으로부터 상속된 토지는 사전(私田)이다. 사전도 수확량의 10%를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한다. 토지제도는 양반(문반과 무반관료) 전시과에 의해서 관료사회를 구성하지만 통치권의 지역 확대에 따라 통치기관 즉 중앙과 지방관청의 운영비조달을 위한 공해전시(公廩田柴)가 있다. 공해전시는 왕실전시(王室田柴), 둔전(屯田)은 한 지역에 주둔한 군관들의 생활비와 군부대운영비용 조달을 위한 농장, 국왕이 백성들에게 농업경작의 시범을 보이기 위한 시범농장인 적전(籍田), 봉건적 도덕 교육기관인 대학(大學)과 향교(鄕校) 운영을 위한 학전(學田)이 있다. 60세가 되면 군복무에서 떠나면서 수조권(收租權)을 반환하는 군전(軍田) 그리고 일부는 군무를 자손에게 인계하고 토지 경작은 상속되는 영업전(永業田)이 있다. 구분전(口分田)은 복무중에 병졸의 생활을 위해서 지급된 토지이다. 외역전(外役田)은 지방관청 관리들의 급여를 위해서 지급된 토지이다. 문과 관료와 무관이 토지를 계급에 따라 분급받지만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며 다만 수확량 10%의 수조권(收租權)만 부여한다. 그 수조권은 당대에 한 하지만 그 직위에 따라 상속되거나 또 병역복무와 같이 아들에게 그 수조권이 상속된다.

3) 지배체제의 내분

건국 초기에는 문반과 무반의 대우가 동등했다. 그러나 3대왕 문종(945~949)시대부터 문관을 우대하게 된다. 8대왕 현종(1009~1031)시대에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었음에도 문관의 건의에 따라 수도방위군의 사전인 영업전(永業田)과 수도방위군 병졸의 사전마저 탈취하여 군관의 급여용 녹전(祿田)으로 전환시켰다. 군전(軍田)의 면적을 제한하고 영업전은 완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예종(1105~1122) 시대에 통치체제는 안정적이었지만 거란과 여진족의 침입을 물리친 무반(武班)의 공적으로 국가는 안정되는 듯 했으나 무반 내부의 불평은 보다 컸다. 17대 왕 인종

1) 결(結)은 면적단위로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고 1등지는 약 3,000평(1평은 3.3평방m), 2등지는 약 5,000평, 3등지는 약 6,800평, 4등지는 약 7,800평, 5등지는 약 9,000평, 그리고 6등지는 약 14,500평 정도이다.

(1123~1146)이 즉위하자 지배세력 내부의 분열이 일기 시작했다. 문벌귀족들의 정치권력을 독점한 세력들은 모든 역량을 다해 토지를 집적(集積)하여 사유화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4) 무반정권의 성립

외부의 침략으로 무반(武班)의 세력이 커지는 한편 문반(文班) 귀족들은 특권적 지위를 향유하는 세력과 이에 저항하는 신진 문반관료 간에 내부분열이 일고 있을 때 18대 왕 의종(1146~1170) 24년(1170)에 정중부, 이의방 그리고 이고(李高)가 공동으로 쿠데타(Coup d'état)로 무신정권이 성립된다. 최충헌은 권력경쟁자들을 모두 제거하고 4대에 걸친 62년간이나 권력을 향유한다. 이 과정에서 고려조 초기에 성립시킨 토지제도는 붕괴된다. 무반 중심의 권문세족들은 군전과 둔전 등의 공전을 초법적으로 집적하여 농장(manor)을 조성 경영하게 된다.

5) 국가의 동요

무신들에게 토지를 탈취 합병당한 토지 소유자인 지주와 농민이 마을을 떠나 방황하고 그리고 지방관청 관료의 일은 공전의 조(租)와 지세(地稅)를 징수하는 것이다. 이들 지주와 농민에 대한 과중한 세금의 강제징수를 견디지 못한 백성들은 살던 마을을 떠나는 사태가 벌어진다. 집권세력은 권력내부의 분열로 통제력을 상실하여 농촌의 농민과 노비들은 전국적인 민란으로 발전하게 된다. 19대왕 명종(1170~1197) 4년(1174)에 황해도 관찰사 조위룡이 반란 농민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반란 농민과 합세하게 된다. 명종 5년(1175)에는 충청도에서 농민 반란이 있었다. 명종 16년과 20년에는 농촌을 떠나 방랑하는 유민(流民)이 많아지자 유민들을 위해서 전시과법(田柴科法)에 의한 외역전(外役田)명목의 토지를 분급해주기도 했다. 20대 왕 신종(1197~1204) 2년에는 강릉과 울진에서 농민반란이 그리고 경상도에서도 도적 떼들이 범람하여 정국이 어지러웠다. 심지어 삼별초(三別抄)가 농민 반란군과 합세하기에 이르렀었다. 이 무렵 위화도에 출병했던 이성계 장군이 회군하여 개성에 들어와 무신이 독점한 토지를 몰수하고 공양왕(1389~1392)을 실각시킨 후 조선왕조를 창건하게 된다.

2. 조선왕조

1)건국과 통치체제

이성계 장군은 조선왕조 초대왕위에 오른다. 태조(1392~1398)의 첫 사업은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우선 고려조에서와 같이 국가중요사안을 논의하는 고위 문관(civil official)과 무관(military official)으로 구성된 자문회를 설치하고 군대의 조직을 개편했다. 개성에 국왕의 친위부대를 두고 국방을 위해서 3개 군단을 편성하고 지방에 주둔시키되 중앙에서 통제하게 했다. 그리

고 관료는 문관과 무관으로 그 외 잡과(miscellaneous field)로 의사(physician), 외교관(foreign service officer), 천문기상관(Astronomical and meteorological officer), 지방관리(petty officer) 그리고 음악인(musician) 7개 분야로 나누어 선발 채용했다. 또 조선왕조 건설에 공헌한 사람들을 개국공신으로 책봉하고 토지와 노비를 나누어 주었다. 권력내부에서 1차 왕자의 난과 2차 왕자의 난을 겪고 2대왕 정종(1398~1400) 2년에 방원이 태종(1400~1418)에 즉위한 뒤 왕권은 안정된다.

2) 양반관료의 정치구조

조선왕조가 안정되자 통치체제를 정비하게 된다. 정치구조는 문관과 무관의 관료체제로 되어있다. 관료의 계급은 18계층으로 층화했다. 내각부(Cabinet Office)의 정승(prime minister)은 1품, 내각 6개부의 판서(장관)는 3품, 도의 관찰사(도지사)는 4품, 군수(magistrate)는 8품에서 10품으로 임명된다. 모든 관직은 양반(문반과 무반)이 차지하고 또 그 양반의 신분은 그 자손들에게 이어진다. 이러한 양반사회는 관료조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부의 관료 가운데 문반은 820명 그리고 무반은 4,000명이라 한다.

3) 양반사회와 경제적 조건

중앙정부의 관료는 수도 근교의 토지를 과전법(科田法)에 의해서 계급에 따라 차등 분급했다. 즉 정1품은 150결, 최하위인 종9품은 10결씩을 분급했다. 또 방원의 왕자 난과 같이 전란을 겪고 왕이 탄생할 때와 정변이 일어날 때마다 국왕에 공(功)을 세운 공신(功臣)에게 국왕은 공신전(meritorious retainer land)을 나누어 준다. 사회의 조직은 문반과 무반의 양반, 양인(良人 또는 상인) 그리고 천민(노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반관료와 공신에게 분급된 토지는 그 수조권(收租權 collectable right of rents)이 부여되었지만 죽은 뒤는 배우자나 자식에게 상속된다. 이러한 상속된 토지는 사전으로 변질되어 세습된다. 양반관료와 공신이 분급 받은 토지는 그 지방의 농민과 결박시켜 경작하게하고 수확량의 10%를 분급 받은 관료나 공신에게 지조(地租, rents)로 납부하고 그 수조권자는 받은 지조의 15분의 1(6.7%)을 지세(land tax)로 국가에 납부한다. 농민은 수확량 10%의 지조(地租)와 전세(田稅), 공납(貢納) 또 균역법(均役法) 실시이후 생긴 성년 남자에게 부과한 군포(軍布), 대동미(大同米) 그리고 삼수미(三手米)수납의 의무를 진다. 양반은 수납된 지조(地租)의 15분의 1의 지세 납부 외는 병역, 공납 그리고 부역의 의무가 없다.

4) 토지제도의 문란

과전법에 의해서 받은 양반들의 수조권이 세습되면서 사전으로 변질된다.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와 관료로서 과전법(科田法)에 의해서 분배받은 토지 그리고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에 합병시켜 토지면적을 확대시키고 있다. 고려시대와 같이 농장(manor)을 만들어 농민과 노비노동으로 경작하게 하고 또 토지가 적거나 없는 상인에게 대여하여 경작케 하고 수확량의 50%를 지대

로 지주에게 수납케 한다. 양반은 이와 같이 지주(地主)로서 양반 외의 농민과 천민을 지배한다. 농민은 지주에게 납부하는 지대(rent)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납부해야하는 공납(contributions)과 부역(compulsory service)의 의무를 진다.

5) 사회의 재편성

조선조가 건국되고 100년이 지나면서 혼란을 맞게 된다. 즉 1504년의 갑자사화, 1519년의 기묘사화, 그리고 1545년의 을사사화라는 내분과 토지면적도 큰 변화가 있었다. 임진왜란이전에는 전국의 경작 토지가 170만 결이었으나 7년간의 임진왜란(1592년), 1627년의 정묘호란, 병자호란(1636~1637)의 외침을 받아 토지가 소실되어 54만 결로 감소되었었다. 뿐만이 아니라 토지대장도 소실되었었다. 인조(1623~1649) 말기에는 120만 결, 숙종(1674~1720)대에는 140만 결 그리고 영조(1724~1776)대에는 145만 결로 늘어났다. 토지조사사업도 부분적으로 했기에 완전한 토지대장은 구비하지 못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경지도 변화가 있었지만 사회의 의식도 변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양반이 농민을 모아 개간하여 농토를 확장했지만 이제 농민도 작물(織物), 채소(菜蔬), 유채(油菜)재배 등으로 부를 축적하여 지주가 된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양반만의 지주의 권한이 약화되고 농민의 권리가 신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지대(rent)도 수확량의 50%를 지불하던 것을 정액지대(定額地代)로, 또 현물지대가 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라 화폐지대로 변해갔다. 인구도 증가해 가면서 양반과 농민 그리고 천민으로 구성된 사회가 지주, 농민 그리고 소작농민으로 분화된다. 또 소작지(小作地)를 집적하여 경영형 부농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그 결과 가난해진 빈농, 무전농(無田農), 그리고 임금 노동자로 구성된 사회로 변했다.

6) 삼정의 문란

전정:

양반 관료들의 부패로 국가의 기본정책인 전정(田政), 군정(軍政) 그리고 환곡(還穀)이라는 삼정(三政)이 문란해졌다. 전정은 정확한 세원에 의해서 과세해야 하나 토지대장이 부정확해서 공정한 과세가 불가능했다. 1700년대에 토지대장이 부정확해서 전정은 개별적으로 과소와 과다 과세가 일반적 이었다. 즉 법적으로는 1결당 4~6두(72~108 liter) 대동미 12두(216.5 liter)등 22~24두(397~433 liter)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40여종의 잡다한 세금을 징수하여 실제로는 60~80두(1,082~1,443 liter)에 이른다. 19세기 말에는 100여가지 세금이 부과되었다. 이러한 과중한 전세(田稅)는 양반지주는 면세되므로 소작인이 부담해야 했다.

군정:

남자 성년 1인당 병역세로(兵役稅)로 군포(軍布) 1필(疋)씩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을

미곡(米穀)으로 환산하면 미곡 6두(104 liter)이다, 한 집에 성년의 남자가 3인이면 군포는 3필이지만 미곡으로 납부한다면 18두(325 liter)를 납부하면 된다. 순조(1800~1834) 시대에 군역법(均役法)에 의한 병역세 납세자(納稅者)의 총수를 30만 명으로 추정하고 각 지방에 공정하게 배분했다. 그러나 지방의 군정 납세자 수는 파악할 수가 없었다. 당시 신분제의 동요로, 즉 신분 상승으로 농민 납세자의 수는 적어지자 죽은 사람을 군적에 올리고, 또 어린 남자 아이를 군적에 올리고 군포 납부를 통보하고 강제 징수 했다. 또 납세의무자가 도망가면 그 친족이나 아니면 이웃 사람이 납부하도록 한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높은 군정의 부담은 민란으로 이어진다.

환곡:

환곡은 춘궁기에 정부보유 곡물을 대여했다가 추수기에 10%의 이자를 붙여 회수하는 구빈책(救貧策)이다. 그러나 환곡의 이자수입이 정부의 세입의 일부가 된 뒤부터 각급 관청에서는 대여 총량을 늘리기 때문에 환곡 재고량이 적어진다. 또 전전(田政)에서의 과중한 부담의 일부를 환곡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당시 환곡을 관리하던 지방 관청 관리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과중한 부담 때문에 미곡(米穀)에 불순물을 섞는 방법으로 미곡의 수량을 부풀리고, 전임자와 인계자간에 결탁하여 창고의 미곡을 횡령(橫領)하고 장부에 허위기록한 허류(虛留=허위장부)를 인계하는 방법, 대여받은 양곡을 반환하지 않는 와환(臥還)으로(반환하지 않고 도망하므로) 환곡의 재고량이 감소한다. 또 각 관청과 병영은 각각 보유한 미곡을 대여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경비를 조달하기도 하고 또 금전을 대출하고 고리의 이자로 강제회수하기도 한다. 환곡의 이자를 국가재정에 충당하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환곡은 구제를 위한 대여가 아니라 이자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또 관리의 부패로 환곡 창고의 양곡수량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부족분은 농민 수탈 강화로 보충하게 한다. 즉 정상적인 이자 외에 부가적으로 고리의 이자를 강제 징수한다. 백성의 필요에 따른 대여가 아니라 도리어 백성들을 궁핍화시켜 드디어 민란으로 발전하게 된다.

7) 농민의 동태와 홍경래 난

삼정(三政)의 문란과 양반 정치의 혼란 속에서 몰락농민의 생활이 극도로 궁핍해졌다. 영세농, 소작농민 그리고 토지없는 농민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었다. 더욱이 빈번한 자연 재해와 질병은 이들 농민을 더욱 어렵게 했다. 몰락 농민의 일부는 세금징수원의 추적을 피해서 마을을 떠나 화전민이 되거나 국경을 넘어 간도나 연해주로 이민 가기도 했고 또 도시나 광산촌 또는 수공업촌으로 흘러들어가 임금노동자로 전락했다. 마을을 떠나지 않은 농민들은 지주의 압박과 삼정(三政)의 수탈로 농촌 사회가 가난해지고 전통적 윤리관도 허물어져가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정치적 및 사회적 의식이 성장해서 이들의 불만을 이틈을 밝히지 않은 벽보로 또는 불만을 토로하는 벽보가 거리에 나붙더니 순조 4년(1804)에는 서울의 도심에 정부를 비방하는 벽보가 붙었었다. 황해도

안악지방 사람들은 정부를 비방하는 노래까지 부르고 다녔다. 순조(1800~1834)가 즉위하던 1800년에는 경북 안동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민란이 일어나 지방 관아를 습격했다. 1811년에는 관서지방을 뒤흔든 홍경래의 난, 또 1862년에는 진주에서 시작된 임술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이러한 민란 속에서 농민의 사회의식도 향상되고 정치지도층도 의식이 바뀌어져 쇄국체제에서 개항과 개방체제를 추구했다.

민란은 동학당과 손을 잡고 1894년(고종 31년) 전라도 고부(古阜)에서 과도하게 탐욕을 채우는 고부군수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되어 동학혁명이 폭발되었다. 고부군수는 만석보(Mansuk dammed pool for irrigation)를 농민을 동원하여 축조하고 그 수세(irrigative fee)를 받아 착복했다. 이 때 정부 요청으로 청군이 파견되자 일본군대도 거류민 보호를 구실로 인천에 상륙했다. 동학혁명 이전 1876년의 개항과 1882년의 임오군란, 1884년 고종 21년 개화파의 갑신정변 그리고 갑오개혁이 일어나 1904년의 한일수교, 1910년의 한일 합병으로 이어진다.

3. 일본식민지시대의 생활상

1) 토지조사

한일합병이 되자 1910년부터 18년까지 한국에서 토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의 내용은 1) 토지 소유권의 조사 2)토지의 지가조사 3)위치와 경계조사로서 지적도를 만드는 것이다.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조사는 신고제이였으므로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많은 토지가 소유자도 모르는 사이에 강탈하는 일이 많았다. 종중에서 관리해오던 토지를 종중의 식자가 자기이름으로 신고해서 종중토지를 사유화하는 사례도 있었다. 소유권제도가 확정되지 않았던 제도의 미비를 기회로 일본 당국은 많은 토지를 사유화하게 되었다. 두 번째의 가격조사는 일본의 투자자에게 토지가격정보를 주는 좋은 자료가 되었다, 세 번째의 위치와 경계조사는 바로 면적과 더불어 지적도를 얻게 된다. 이러한 조사는 일본인 투자자에게 토지투자의 최상의 자료가 되는 동시에 토지침탈의 기회로 삼았다.

프랑스 노르만의 잉글랜드 정복자 윌리엄은 세원과악을 위해서 토지대장(Domesday book)을 작성하게 했다. 토지대장에는 소유토지와 농부 수 그리고 쟁기와 삼등 농기구까지 소유자별로 작성했다. 농가의 집에 있는 나무위에 독수리가 둥지를 틀고있으면 산란의 개수까지 조사기록하게 했다. 이것은 그가 죽기 1년전인 1086년에 완성시켰다 한다. 우선 정복자는 중세 때도 우선 세원을 조사하게 된다. 1919년 3월 1일을 우리는 “3.1절” 만세사건으로 기억하나 경제사학계에서는 1919년 3월 1일 경계로 큰 변화가 일고 있다고 한다. 즉 농촌이 와해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농촌에 일본자본이 침투되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 하나는 농토를 탈취당하여 이농 유민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다른 하나는 토지에 투자된 자본에 대하여 과거와 같은 봉건지대가 아니고 고율의 지대로 소작료쟁의가 빈번하고 있는 점이다. 1920년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농민가

운데 소작농이 39%나 되고 자작 겸 소작농이 60%나 되어 큰 변화상이다. 또 한일 합병 전에 한 일이 합자로 1908년에 설립한 동양척식회사가 합병이후 일본의 전유물이 되었다. 그러한 동양척식회사의 토지소유면적이 1910년에 11,936정보이던 것이 1924년에는 96,280정보로 급상승했다.

1918년 12월말로 토지조사가 완료되자 159,400정보가 조선총독부소유로 귀속되었다. 이 농토는 후일 일본인들에게 불하했다. 여러 형태로 1913년에 일본인 거대지주는 81,000호이었으나 1929년에는 1,004,000호나 된다. 이러한 증가세는 한편에서 한국인 소작인수가 반사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1923년에 소작농이 1,072,000호이던 것이 1929년에는 1,283,000호로 증가했다. 농토에 일본자본이 침투되면서 농민이 농촌을 떠나 화전민이 1920년에 120,000정보이던 것이 1928년에는 300,000정보로 급증했다. 또 도시근교의 토막민의 1927년 447호이던 것이 1931년에는 1,538호에 3,000명, 1938년에는 3,300호에 17,000명이나 된다. 이 토막민은 도시의 일용직노동을 위해서 농촌을 떠난 사람들이다. 토막집은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땅을 파서 나뭇가지로 지붕을 만든 것이며 다른 하나는 땅위에 네 기둥을 세워 나뭇가지로 네 벽과 지붕을 만들어 덮은 것이다.

해외로 유민된 사람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었다. 중국의 동북지방 연해주에 한일합병 전인 1882년 10,137명이, 1892년은 16,564명이, 1902년에는 32,410명 또 1908년에는 45,397명으로 증가해왔다. 이들이 농촌을 떠나 주로 용정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되자 일본의 통감부에서는 용정에 과출소를 설치하고 헌병이 주둔했다 한다. 용정뿐만이 아니고 러시아령에도 거주했다. 러시아정부에서는 한국인의 러시아이주를 환영했다한다. 그 이유는 한국인이 농토를 개발 농작물을 생산하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과출소의 헌병들을 한국의 독립군과 용정의 주민과 결탁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군 주둔을 증가시켰다한다. 1876년 강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내한 일본의 외무대신 미야모토 쇼이이치(宮本小一)은 우리나라 영의정 이최응(李最應)에게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소환해줄 것은 진언했다 한다. 이와 같이 1930년도에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700,000명, 중국 동북지방에 900,000명 그리고 러시아령에 300,000명이 이주해 있었다 한다. 이들 이주자가 모두 농토를 탈취당하여 이주한 것은 아니다. 우국지사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짐작된다. 한 러시아 정부 경제국장은 자기 조부가 나라가 없어졌다하여 안동과 대구사이의 한 지방에 살다 한일합병이 되자 러시아령 우라지브스토그로 이주했다 한다. 조부모는 1930년에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했고 부친은 모스크바로 유학해서 자기는 모스크바에서 출생했다 한다.

1927년 12월 경기도 안성군 보개면 가토리에서 동양척식회사 소작농의 쟁의가 해결되지 않아 최후수단으로 집단 이민한 사례가 있다. 매년 과중한 소작료 때문에 부채가 누적되어 1927년의 농작물수확량 전량은 지주와 대금업자에 바치고 농촌을 떠나 이민의 길을 선택했다 한다. 일본자본이 한국농토를 탈취하고 지대의 이윤화로 고율의 소작료가 부과되어 소작쟁의가 매년 증가 일로에 있었다. 일본 총독부 조사에 의하면 1930년에 725건에 이 쟁의에 참가한 농가 수는 12,000

호 1937년에는 31,798건에 참가한 농가 수는 398,000호 그리고 1939년에 16,000건에 15,000호다. 이때는 이미 중일전쟁기간이라 쟁의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즉 무력적 위협에 과중한 소작료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마치 “밀레의 만종”을 연상케 하는 평화스러운 한국농촌을 초토화시키면서 착취한 부로 제국주의 전제에 돌입하게 된다. 이러한 지원병, 징병, 학도병, 징용, 여자정신대로 동원된 인원의 기록은 없다. 다만 해방이후 살아서 귀국한 동포의수만이 밝혀졌다. 남한에 귀국한인원은 일본에서 1,100,000명 만주에서 귀국한수는 317,000명 중국에서 귀국한 사람이 37,000명 모두 1,523,000명이나 된다. 북한에 귀환사람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2) 전쟁 노예화

일본은 중일전쟁과 미국과의 전쟁수행을 위해서 한국의 청소년 소녀를 동원하게 된다. 학업중인 고등학교와 전문학교 그리고 대학 학생을 전쟁에 투입했다. 일반 청년에게도 지원병이라는 미명으로 전쟁터에 내몰았으며 징병령에 의해서 19세 청년 전원에게 신체검사를 받게 하고 모두 전쟁터에 내몰았다. 징병연령을 초과한 청장년을 징용(徵用)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동원시켜 군수공장에서 광산에서 또는 전쟁에서의 군수물자운반등 위험지역에서의 노동에 동원했다. 뿐만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여자정신대”라는 미혼여성을 강제 동원시켜 군수공장에서 또는 전쟁터에서 위안부로 종사하게 했다. 청장년이 모두 전쟁에 동원되어 농촌에 농사에 일할 인력이 없어 초등학교 학생을 집단적으로 동원 농사일을 담당하게 하게 했다. 또 초등학교 학생은 군마(軍馬) 먹이의 건초생산에 이용했고 여름방학이나 일요일에 송유(松油)채취에도 동원했다. 초등학교 어린이까지 동원해서 경작한 가을 추곡은 모두 공출로 뺏어가고 한국인에게는 만주산 대두(大豆)로 콩기름을 채유하고 그 부산물인 콩깻묵을 배급해주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착취는 세계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본다.

4. 1945년 해방이후

1) 해방과 한국전쟁

인구는 1944년 전 조선 인구는 25,128,000으로 공표하고 있어 남한 인구는 16,091,000명으로 추정하면 북한에는 약 900만으로 추정된다. 남한에 1,600만 명으로 추정되나 해외에 귀환하는 인구는 3,323,000명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북한에서 월남한 인구가 1,800,000명이 포함된다. 1946년 미군정에서 발표한 인구는 19,369,000이다. 정확한 인구는 정부 수립한 다음 해인 1949년의 국세조사(National Census)에 의하면 20,166,756이다. 1945년에서 1949년까지 4년간에 인구는 4,075,000명이 증가했다. 1949년까지 사회적 증가는 3,323,000이고 자연증가는 752,000밖에 안 된다. 4년간 인구는 25.3%나 증가 했다.

<표 1> 남북 간 산업생산 비교(1944년)

항 목	남한(%)	북한	합계
capacity of power generating(kw)	138,728(13)	928,420	1,067,138
metalworking products(1000 won)	13,662(10)	122,489	146,151
chemical products(1000 won)	91,172(18)	410,587	501,751
cultivated land for rice(ha)	1,0544,741(64)	587,007	1,641,748

Source: Bank of Korea, *Economic Review*, 1948, pp.1-99, pp.110-114.

2) 한국전쟁

한국전쟁(1950.6~1953.7)으로 한국의 군인은 256,901명, 민간인은 928,761명이 사망해 모두 1,185,612명 사망했으나 북에서 남으로 유입된 인구는 약 1,000,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1949년부터 1955년까지 6년 동안 자연 증가는 1,150,568명이나 된다. 한국전쟁 기간에 물적 피해는 민간 생산부문(private industrial sector)을 비롯해서 공공시설(public equipment) 등등 모두 4천 123억 환으로 (412,300,000,000환) 당시 환율로(20대1)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한국전쟁기간 한국산업시설 파괴상태

항목	전쟁 전(1949)	전쟁 후(1954) (%)
generating power(kw)	90,000	11,000(11)
cotton yarn(1000 pound)	19,307	7,647(40)
robber shoes(1000 ea.)	15,677	6,096(39)
locomotive engine(ea.)	674	265(39)
freight train(ea.)	11,425	4,913(43)
passenger train(ea.)	1,183	363(30)

자료: 한국산업은행, *Economic Review*, 1945-1955, pp.185-285.

<표 3> 한국전쟁 피해상황(1950-53)

(단위: 10억 환)

Content	Amount
Private industrial sector	83.2
Dike equipment	1.0
Water supply facility	0.7
Banking institution	27.2
Transportation	3.2
Harbor facility	1.0
Road	5.7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38.0
Education institute	82.6
Medical institute	1.4

Welfare incitations	0.4
Religions Institute	1.4
Public institution	2.0
Public buildings	0.5
Private houses	161.3
total damage(\$20billion)	W412.3

<표 4> GNP와 재건을 위한 자원 계획

(단위: 100만 달러)

년 도	GNP(A) (A)	외국원조 (B)	가용자원 C = A + B	투 자	1인당가용 자원(\$)
1953	950	200	1,150	90	64
1954	1,080	295	1,375	175	49
1955	1,210	350	1,560	260	55
1956	1,320	335	1,655	275	58
1957	1,430	295	1,725	275	61
1958	1,530	185	1,715	215	63
1959	1,620	90	1,710	185	64
1960	1,700	0	1,700	150	64

Source: 한국산업은행, *Economic Review*, 1945-1955, p.28.

한국전쟁(1950~1953) 이후 1960년까지는 사회간접자본의 복고기간이라 할 수 있다. 전쟁으로 파괴된 생산시설을 복구하고 또 무연탄 광산도 개발해야 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운동을 정상화 시킨 기간이기도 하다. 즉 파괴된 사회간접자본을 복구시키고 무연탄의 생산과 수송을 위해서 새로운 철도를 건설해야 했다. 이와 같이 전쟁 복구와 새로운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은 외국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즉 원조는 UN의 원조와 미국의 원조 1945년부터 1957년까지 12년간에 21억1,200만 달러나 되었으며 그 후 1억3,400만 달러나 추가 된 셈이다. 1953년부터 60년까지는 17억5,000만 달러나 된다.

<표 5> GNP(1975년 불변가격)와 빈곤인구 빈곤율

년도	GNP(100만원)	빈곤인구(1,000명)	빈곤율(%)
1955	2,423,618	14,095	65.5
1960	2,845,640	13,893	56.1
1965	3,884,990	11,716	40.1
1970	6,347,700	7,984	25.4
1975	9,792,890	5,376	15.1
1980	13,842,810	3,665	9.5

3) 자립경제체제

1960년 학생시위로 정권이 교체되었으나 미국의 대한원조가 1억8,000만 달러가 삭감되어 소비재 부족과 예산에서 세입 부족으로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혼란 속에서 1961년 군사쿠데타로 또 다시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다. 이 정부는 연평균 7.4%의 성장률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자금 조달에 전력을 기울였다. 즉 외자 도입과 공공차관 사업사관 그리고 직접투자, 그 외에 IBRD, IMF, ADB에서의 차관을 도입하기로 했다. 1960년부터 1985년까지 도입한 외자는 1,217억600만 달러나 된다. 정부는 외자 도입 상황을 위해서 수출산업에 전력을 경주했다.

절대 빈곤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속하는 가구를 말한다. 즉 신체적 건강과 노동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킨 정도 이하의 소득을 말한다. 구체적 정의를 위해서 빈곤선이라 하는 최저소득을 말한다. 그 방법은 두 가지인데 시장가격기준(market basket)이고 다른 하나는 엥겔방식(Engel method)이다 시장가격기준 최저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내용과 절대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엥겔방법은 음식물에 대해서만 시장가격 수준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에 그 나라의 엥겔계수의 역수를 곱해서 빈곤선을 얻는다. 현재 우리나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시장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시장가격기준으로 빈곤선을 결정하고 얻어진 빈곤율은 1950년대 당시의 어려운 사정을 말하듯 참담하다. 즉 한국전쟁이 휴전된 1953년의 빈곤인구는 15,516,150으로 인구대비 빈곤율은 72.3%나 되고 1954년의 경우는 빈곤율이 68.8%로 적어졌고 1960년에는 56.4%로 적어지고 1965년 빈곤율은 40.9%로 적어졌다. 1975년의 빈곤율은 14.9% 그리고 1980년의 그것은 9.7%로 낮아졌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 해산 보호, 장애보호가 있는데 거택보호자는 주거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생계 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 보호 그리고 장애 보호까지 받게 된다. 이 거택보호 대상자를 빈곤자라 할 때 그 대상자는 1965년 인구대비 40% 도시의 경우 55%나 되었던 것이 2000년에는 7.2%로 감소되었다.

1959년의 경우 1인당 가처분소득은 미화로 60\$이었고 절대 빈곤율은 50%나 되었었다. 1959년 10월의 태풍으로 농작물도 흉년이였다. 1960년은 마침 대통령 3선을 제한한 헌법까지 개정 3선에 출마 당선되었다. 이 대통령 3선이 부정선거라는 이유로 학생의 항의시위가 격화되어 대통령은 사임했다. 정권을 이어받은 정부는 혼돈을 거듭하다 1961년 군인들의 쿠데타로 군사정부가 수립되었다.

4) 불평등

불평등은 가계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불평등 지표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77로 한다. 분석 기간은 1965년부터 2013년까지로 한다. 표는 5년 간격으로 한다. 위에서 1975년부터 1985년까지 불평등도는 악화되었다가 1990년부터 안정세로 전환된다. 1975년 이후 불평등이 높아지고 있

는데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고 경제적으로도 외화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다. 1979년 대통령 암살되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되어 1990년부터 안정화된다.

불평등은 약 10년간 악화되었으나 그 동안 경제가 성장하면서 양극화라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다. 양극화는 소득자간에 최저소득과 최고소득간의 격차가 커지는 것을 말한다. 즉 직종간, 학력간, 업종간 그리고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도시 근로가계의 소득분포(income distribution)에서 제10분위 소득점유율(income share X)과 제1분위 소득점유율(income share I)간의 배수($m = X / I$)로 표현할 수 있다. 위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 배수(m)는 1965년에 6.3이던 것이 2013년은 11.9나 되어 현저하게 높아진 편이다. 이 배수는 1985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하여 1990년에는 9.0 그리고 1995년에는 8.8로 약간 적어지는 듯했으나 2000년부터 그 배수는 높아져 양극화가 진행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격차는 경제가 성장하고 세계화되면서 커지는 경향이다. 일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커지면 임금도 높아지고 또 국제적 경쟁 때문에 기업의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경우가 있어 CEO와 일반직 간의 보수격차는 커지게 마련이다.

<표 7> 지니계수와 1분위(I)와 10분위(X)간의 격차(X/I)

year	Gini coef.	decile I	decile X	X / I
1965	0.289	3.4	21.5	6.3
1970	0.266	4.0	23.3	5.8
1975	0.312	3.5	25.3	7.2
1980	0.312	3.6	25.0	6.9
1985	0.318	3.3	27.2	8.2
1990	0.302	3.2	28.8	9.0
1995	0.282	3.1	27.3	8.8
2000	0.265	3.0	28.5	9.5
2005	0.279	3.2	32.9	10.3
2010	0.283	3.1	39.4	12.7
2013	0.276	3.2	38.1	11.9

5) 결론

고려왕조와 조선왕조 시대의 빈곤율은 계산 할 수 없다. 다만 빈곤의 원인과 빈곤의 상태를 분석해야 된다. 당시의 소득의 분배 상태를 토지제도와 신분제도로 보아 역피라미드형으로 조직되어 정권수립 300년까지는 안정적이였다. 그러나 토지제도의 운영의 모순으로 집권세력간의 항쟁으로 세도가는 전력을 다하여 타인의 토지를 약탈 병합한다. 농토를 약탈당한 사람은 살던 마을을 떠나거나 연해주(북간도)로 이주하거나 화전민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빈곤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자 권력자에 저항하는 민란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전국적인 민란의 상태가 빠른 빈곤 상태의 심화를

뜻하고 드디어 왕조는 붕괴된다. 고려왕조나 조선왕조가 같은 형태로 왕조는 붕괴되었다. 1945년 이후 남과 북의 분단과 한국전쟁(1950~1953)으로 빈곤 상태는 심화 되었으나 외국의 원조 즉 식량을 비롯한 소비재와 기술원조로 극복할 수 있었다.